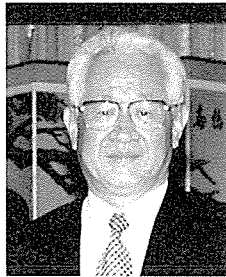


## 위원회 활성화 활용극대화 해야 전문직 확충 환경산업 육성절실

### 환경세계화의 원년

'처'에서 '부'로 승격된 환경부의 올해 주요 업무추진방향을 살펴보면 95년도 국정운영의 기본과제인 '세계화', '지방화'를 환경보전분야에서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올해를 환경세계화 원년으로 삼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 다섯가지의 환경시책 기본방향 중 '환경과학기술을 중점개발해서 우리의 환경개선 역량을 더욱 키우고 지구환경보전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것을 첫째로 꼽았다는 사실에 우선 호감이 간다. 그러나 보건사회부 산하 외청이던 환경청이 90년에 환경처로 승격되었을 당시의 환경처장관도 그 해를 환경보전 원년으로 삼고 분골쇄신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기억난다. 모두다 시류에 걸맞는 기본방향이라 생각하며 '처'에서 '부'로 위상이 높아진 환경부의 출범에 박수갈채를 보낸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체계화하여 환경관리상의 자치능력과 대외경쟁력을 제고, 환경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보전의식의 세계화 추진, 환경오염의 원인자 비용부담원칙과 환경개선비용의 수혜자 부담원칙의 확립 및 지방자치단체용 환경투자재원의 확충과 형평유지, 그리고 국민과 산업체



盧在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가 스스로 환경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내실있는 환경교육과 홍보의 실시 등 기타 주요업무 추진방향도 시기에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당면한 현안과제인 '쓰레기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가뭄기간에도 깨끗하고 넉넉한 상수원수를 확보해서 국민생활에 검약정신과 안정감이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방향도 긍정적인 내용으로 평가된다. 다만 위의 다섯가지 주요업무 추진방향이 내포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업무량이 예상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몇가지만 당부해 놓겠다.

### 각계 의견 교통정리 잘해야

환경문제의 현재화(顯在化)를 의식한

끝에 환경청을 출범시킨 80년대 전반만 하더라도 개발주체의 힘에 눌려 힘 없는 부처라며 일하기 힘들다는 등의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러나 자조적(自嘲的)인 탄식만 반복한다고 해서 나라의 환경문제가 절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일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이 빈약한 것이었다면 더 강력한 정책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전문두뇌를 동원해서 바로 잡는 것이 옳다고 본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면서 각종 환경모임도 백가쟁명의 장을 연상할 수 있을 만큼 각종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상반된 이견을 조정하고 국민의 뜻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인내와 이성의 유지가 요구된다고 본다.

바로 이러한 의견수렴과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보전위원회와 그 실무대책위원회 및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비롯한 12개 분과위원회와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4개 자문위원회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다. 물론 설 틈조차 주지 않고 빈발하는 환경실무 부하때문인지 각종 위원회의 활용이 미흡한 것 같다.

이 점 필자가 익히 아는 한 부처에서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한 정책협의회를 설치, 매달 한번씩(주로 조찬회

형식) 개척하되 장관이 배석하는 등 성의를 보이고 있으며 위원발언내용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을 일일이 알려주는 등 위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게 하고 있는데 매우 대조적인 경우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술한 정책개발이 가능하였다는 그 부처 간부들의 후담이었다.

### 이론·실기 능한 기술직 길러야

환경청 출범 당시 환경행정전담 중앙부처인 환경청의 공무원 정원표를 보면 1급 내지 7급까지의 총 1백84명(청·차장과 그 부속실 요원 9명과 고용직 53명 제외)중 행정직이 85명(46.2%), 기술직이 82명(44.6%) 그리고 복수직이 17명(9.2%)이었다. 즉 행정직과 기술직이 각각 반 정도 엇비슷했었으나 환경처로 승격되고 환경부로 정착된 오늘날에는 행정직 132명(출범당시 대비 155.3%로 증가), 기술직 95명(출범당시대비 115.9%로 증가) 및 복수직 119명(출범당시 대비 5.6배)이 됨으로써 각각 38.1%, 27.5% 및 34.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행정직 정원의 증가가 기술직 정원증가를 훨씬 웃돌고 있다.

이와같은 추세가 과연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세계화에 걸맞는 전문화 등 기술입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현장의 세밀한 부분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올바른 정책검토·수립이 가능하고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평이 우세하다. 즉 과학기술적 기본자료(baseline data)에 바탕을 둔 환경정책의 개발과 환경 개선이 절감되고 있는 현대기술사회에서 행정직 위주의 조직으로 자연환경

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행정을 펴 나간다면 빈번한 시행착오의 발생소지가 많아지게 될 것이 아닌가? 또 이론과 현장은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정책수립을 위해 현장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데 환경부내에서는 이론과 실기에 능한 공무원의 진출이 제한돼 있다는 여론도 있다. 우리는 과학기술적 의견을 배제한 무리한 정책수립과 시행이 가능했던 지난 날의 정권말에서 횡포에 가까운 행정이 빚은 술한 시행착오로 많은 시련을 겪어야 했고 국민의 혈세로 이룩된 국가예산의 낭비가 자초됐음을 결코 잊을 수 없다.

### 治水행정 일원화 절실

오늘날의 우리나라 환경정책중 무엇보다 급하며 중요한 것의 하나가 맑은 물 확보와 그 공급문제이다. 그러나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하천 수계망과 지하 대수층(帶水層)의 관리가 다지화(多枝化)된 치수행정의 상존으로 그 효율성이 저해됨으로써 맑은 물 공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점 치수행정을 환경부로 모으라는 최근의 국민여론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받아들임이 현명하다고 본다. 지난해 질적 관리면에서 일원화된 치수행정만으로 맑은 물을 확보·공급하려면 이른바 end-of-pipe식이라는 비용가중형(加重型) 관리기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리나라 수자원에 대한 치수행정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환경청 출범전부터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국회 경제과학위원회와 경제과학심의회와의 긍정적 협의 결과를 얻어낸 바 있었다.

그러나 관련부처간의 협의 결렬로

인하여 1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해결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상수원인 4대강 수질관리대책을 성공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질적·양적 물관리기능의 일원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설득력있게 이해시킴으로써 문자 그대로 산지수명한 자연환경에서의 맑은 물 공급이 실현되도록 애써주길 간곡히 바란다.

식수원과 관련해서 상수원의 최후 보루인 지하수 자원을 무분별하게 마구 잡이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보며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지하수 자원을 완벽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수질오염을 이유로 해서 버림받은 꼴이 된 4대강의 상수원은 물론 지하수 자원도 이용하기 어려운 국가적 캐티스트러피를 피할 길이 없다고 본다.

이 점 쓰고 버린 물을 간이정화해서 허드렛물(수세식 화장실 및 청소용)로 다시 활용하는 중수(中水)시스템의 확충 및 수도물의 사용 절약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개발·정착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수자원대책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평가된다.

### 쓰레기 종량제 재활용 대책을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한달 동안에 쓰레기 배출량은 28.9% 만큼 감소하였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41%나 늘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활용 대상품의 관리기반시설(처리능력)과 행정체제의 부족으로 수거된 채 그대로 쌓여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국 33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해결이나 대안도 없이 전국적으로 무조건 시행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처리 방식에 대한 책임성이 더 문제가 있으

며 이것은 반드시 추궁되어야 한다는 여론의 지적을 자초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분리수거와 자원재활용이 국민들 가운데 정착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를 더 확실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분리수거에 직접 참여하는 주부들이 보람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산 교육이 될 수 있게 주부들을 격려하고, 유종의 미를 걸을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인센티브제도의 마련이 꼭 실현되었으면 한다.

가령 소주병이나 맥주병 등의 빈병에 대해서 환불해 주고 있듯이 화장품병이나 커피병 등에 대해서도 빈병값을 공제해 주거나 환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집앞 도로를 청소하는 미풍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지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폐비닐 재활용사업을 맡고 있는 자원재생공사 사업내용도 차라리 이번 기회에 조정해 볼만하다고 본다. 즉 분리수거된 재활용성 쓰레기의 수거와 이를 재생사업체로 넘겨주는 업무로 조정하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들 폐자원 재생업체에 대한 업무위탁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자원재생공사가 흑자를 전제로 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재고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전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산업환경시장 3천억달러

오늘날의 환경산업이 점유하고 있는 세계 시장규모는 약 3천억달러이며 국내시장규모는 약 30억달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것이 2000년에는 세계

적으로 6천억달러 그리고 국내에서는 8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춘 선진환경기술을 슬기롭게 접목시킨 국내 환경기술 수준의 고도화를 통한 국내 환경문제 해결에의 기여를 극대화함은 물론 환경산업 육성의 가속화라는 1조1석의 전략적 배려가 요건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에 G-7수준의 선진국대열로 진입하고자 온갖 노력을 쏟고 있다. 그렇게 되려면 지구 환경문제 해결 측면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 때쯤 되면 세계 환경시장규모의 10%(6백억달러) 정도는 차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문도 있음직하다. 각고의 노력을 쏟아 부어도 연간 1천억달러를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 6백억달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 점 냉장고의 냉매용으로 쓰여져 온 HCFC-22의 최적 대체물질인 HFC-32의 개발에 성공한 것이나 레이저를 이용한 오존층 파괴여부와 대기오염도를 정밀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재래식 백열전구 대비 80%만큼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는 전구 및 황함유량이 10ppm 미만인 액화천연가스과 선진국 수준보다 월등히 황함유량이 적은 청정 등유를 개발하는데 성공한 것 등 우리나라 환경과학기술 발전상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형 연구개발부문과 청정기술 등 공공복지기술분야의 하나인 환경과학기술개발에 대한 획기적 지원·육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풍부한 과학기술잠재력을 어떻게 해서 환경과학기술 연구

개발쪽으로 수렴시키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 황해오염 산성비 한·중 협력 필요

황해의 오염과 산성비 문제 등 중국의 공업화로 인한 한·중 양국간의 환경현안이 정부에 의해서 곧 공식적으로 제기될 것이라는 보도에 접했다. 그러나 이는 한·중 두나라 등 당사국을 포함한 '국제적 공동조사'의 틀로 차근차근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당사국들이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근거를 갖고 본격 협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가해자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측은 산성비나 황해오염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고 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공개마저 꺼려했던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국제과학연맹이사회(ICSU : 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s) 산하 프로그램인 국제 지구권·생물권계획(IGBP : International Geosphere - Biosphere Programme) 등 국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민간기구(NGOS)가 추진중인 각종 국제연구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과학적인 4차원적 정성·정량분석을 선행시켜 오염물의 발생원, 이동과정, 이동후의 침적상황 및 그로 인한 영향 등을 객관성있게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현재 IGBP사업을 지원하는 START(Global Change System for Analysis Research and Training)의 네트워크중 온대 동아시아위원회(TEACOM : Temperate East Asia

Committee)가 계획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조사계획에 이 문제를 포함시켜 공동참여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며, 이 과제에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제반경비 지원을 환경부가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필요할 경우 UN 환경계획에 촉매(catalyst)역할을 위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같은 예는 이미 지중해 보전계획에서 볼 수 있다.

### 환경영향평가 제대로해야

환경보전법 시행전에는 이른바 EOP(end of pipe)식 대책법이었던 공해방지법에 의거, 배출시설 설치를 원하는 자에 두가지 구비서류제출을 요구한 규정이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시설설치예정 부지 주위의 기상조서였는데 이는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는 무가치한 들러리식 환경조서에 불과하였다. 즉 배출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오염물의 방출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평가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설치 예정부지 상공에서 지배적인 월별, 계절별 수직기온분포 및 유의(有意)고도에서의 풍향·풍속관측치를 통계분석한 다음 지형을 고려한 대기확산모델을 모사하고 공정별·발생원별 대기오염 영향여부의 예측과 그 방지대책수립을 위한 과학적 자료를 수록·참조케 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론적 바탕이 인접하천수계나 바다 또는 호수 등 수체(水體)내에서의 오염물 이동·확산에도 적용되므로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환경현황파악을 담은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내실화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즉 ① 사전에 문제점을 가려내서 상응한 최적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 ② 개발행위가 미치게 될 광범위한 환경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③ 환경문제의 개별성 및 지역특성을 신중히 배려한 내용, ④ 환경영향평가서 자체가 잉태하고 있는 조정기능의 중요성을 언급한 사항, ⑤ 환경문제 자체가 안고 있는 미지성 또는 불확실성을 설명한 내용, ⑥ 개인별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사실에 대한 인식 정도의 상반성(相反性)과 평가과정을 구별한 내용 즉 객관성을 구체적으로 밝힌 하나의 사회적 협의형성시스템으로 평가한 내용 등이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결정된 개발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되며 또 법적 근거용 구비서류(공증용)가 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이다. 즉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안의 모색과 자연환경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환경보전정책인 경우 인간활동이 제약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하겠다. 또 지방자치단체에게 환경영향평가권과 사후관리권도 넘김이 좋을 것이다.

### 인간활동 따른 통합관리 필요

오늘날의 세계적 공동의식은 지구환경변화 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환경부문 주요과제는 자원과 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환경문제의 해결이라는 양면연구를 학제적 교류·협력하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점 환경부의 기능강화가 현실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

적해 두지 않을 수 없다. 즉 환경행정은 단순한 오염규제차원의 행정이 아니라 인간활동에 따른 환경파괴의 원인과 결과를 과학적으로 따져 자원관리와 환경관리를 통합적으로 다루어야만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수자원관리, 자연환경보호, 에너지수급 계획 등을 환경부가 일원적으로 관장케 함으로써 환경보전이 전제된 ESSD(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적으로 지탱가능한 개발)적 국가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효과적으로 수행케 해야 할 것이다.

곧 현실화될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개발사업의 난립과 환경문제의 복잡화 가능성 및 통일후의 한반도의 환경상황까지 연계시켜서 설정해야 할 환경기준 문제 등 환경부의 책무는 날로 무거워질 것이 뻔하다.

아마도 국민이 회구하는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및 쾌적한 생활환경의 향유를 조기에 실현케 하는 길은 환경개선 위주의 행정개혁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리라고 본다. 아울러 부언해 두고자 하는 점은 고도성장이 안정세로 접어드는 단계에 과감한 환경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실증한 선진국의 경험을 겸허히 수용해야 옳다고 보는데 바로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그 단계에 벌써 접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가 곧 맞게 될 21세기를 질(質)과 문화와 생명의 가치가 우선되는 세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다함께 공동의식을 갖고 환경보전이라는 시대적 욕구를 승화시켜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부'로 승격된 환경부의 책무가 한없이 막중하다 함을 지적하면서 격려의 뜻을 심어두는 바이다. ⑤7